

2011년 축산업 주요 뉴스

정리 : 편집부

■ AI 및 FMD 가축전염병 발생... 역대 최고 피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재발한 FMD(구제역)가 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된데 이어, 같은 해 12월 29일 천안시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병하여 국내 축산업의 악재가 겹쳤다. 특히 우리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HPAI는 2011년 5월 16일까지 전국 6개시·도, 25개 시·군에서 총 53건의 양성판정으로 확인, 6,472,711수의 가금이 살처분되었다. 가축전염병 발생은 그 후폭풍이 더 거셌으며, 국내 축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일부 축산물의 공급부족사태와 가격폭등이 이뤄졌으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지 환경문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과 축산업 허가제 도입·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의 대책이 추진됐으며 연말 축산법도 개정됐다. 하지만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불신은 축산농가와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축산업 선진국과 잇따른 FTA 체결

지난 2011년 7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데 이어 최근 미국과의 FTA비준안이 국회로 통과되면서 시장개방화의 연이은 회오리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 비준은 빠르면 이번 달(2012년 1월)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돼 축산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10개 국책연구소 공동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로 축산분야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1649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15년 동안 약 2조 500억 원 가량의 축산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한·미 FTA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의 축산업 생산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도 정부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오리생산지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앞서 국내산 오리산업을 사수하기 위한 시급한 자구책마련이 촉구된다.

▣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권고안 파문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축산업의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약 230개 지자체 중 80%가 넘는 190여곳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은 주민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기준과 이로부터 가축별 거리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은 가구의 최소단위인 5~10호, 거리제한은 가축별로 오리·돼지·개·닭 500m, 소·말 100m, 젓소 250m이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축사가 이 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생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인 환경부와도 협의를 통해 풀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지난 2011년 7월,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 내용을 개정해 동물 사료에 첨가되던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키로 했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는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및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을 감소로 이어져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은 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로 인해 농장 질병이 증가하고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축산전문가들은 사료첨가용 항생제 금지 이후에도 농가에서 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고,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축산계열화법 제정

축산계열화법이 지난 2011년 12월 28일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리95%, 육계85%, 양돈20%의 물량을 처리하는 축산 계열화 사업운영과 공정거래의 법적토대가 마련된 셈. 축산계열화법은 사육계약의 표준화, 병아리 품질보증, 분쟁조정기구 등의 법제화 등이 포함됐으며 여기에 총 34개조항과 부칙을 통해 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이 제시돼 있다.

▣ 범축산업계,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창립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지난 2011년 11월 25일 창립회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축산생산단체와 농협 등 범 축산업계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축산업계의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운동 활성화를 주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축산업계의 나눔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한 것. 앞으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사회공헌활동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담하

게 되며, 환경적 책임활동, 경종농가와의 상생협력활동, 소비자들과의 이해교류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국내 최초 GPS(원종)종오리 도입

지난 11년 7월, GPS종오리 6000여수가 국내로 들어와 국내 PS종오리 생산기반이 마련됐다. GPS종오리는 전남 장흥소재 한국원종오리회사에 입식된 상태이며 한국원종오리농장이 본격 운영에 돌입하면 연간 34만수 정도의 PS종오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PS종오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리업계는 그동안 매년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PS종오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PS종오리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PS종오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 축산법상 불법인 F1오리(종오리이외의오리) 사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년 만에 오리 시세 최저가 기록

오리가격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 10월 3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다. 2011년 10월 24일에 조사된 시세정보에 따르면 새끼오리·생체오리·신선육·토치육 가격은 각각 700원·5700원·7200원·7400원으로, 9월 900원·6300원·7800원·8000원보다 평균 10%가량, 지난해 1000원·6500원·7500원·7700원보다 많게는 30%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오리가격은 대체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매년 상반기에 가격이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말에는 수요 증가로 가격대가 연초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최저가를 기록한 오리고기 가격은 연말이 되어도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1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리시세가 최저가를 기록한데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F1오리를 씨알로 사용하여 생산한 오리들의 입식 증가로 인해 물량이 넘쳤기 때문이다. 오리 가격이 3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지만 소비 또한 급감되어 재고량 또한 넘치고 있어 오리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